

**특보**

# 발전노동자

- 민주노조 사수
-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 가짜 정상화 분쇄
- 경영평가 무력화
- 예고자 원직복직

제6호



2014.8.25(월)

## 퇴직금 삭감, 압도적인 반대로 우리의 삶을 지킵시다!

남부발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올해 초 발전노조는 남부노조에게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공동교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노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발전노조의 교섭참여를 거부하였고, 그들끼리 진행하는 남부노조의 교섭은 내용과 절차면에서 황망함 자체였습니다. 교섭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발전노조는 끊임없이 분석하려고 노력했고,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보의 부족으로 전반적이지는 못했지만, 남부발전 소속 노동자들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짜 정상화와 관련하여 경영진들과 기업노조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진은 정보 왜곡과 협박으로 불안심리를 조장하면서 직원들을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측의 정보 왜곡을 바로잡고 협박을 차단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시키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건만, 남부노조는 오히려 회사가 조장해 놓은 불안심리에 편승하여 조합원들에게 ‘포기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발전노조는 회사와 남부노조의 폭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남부노조와 같은 날 같은 내용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남부발전 노동자 전체를 상대로 퇴직금 삭감 반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느 사측 간부가 남부노조 투표에 발전노조가 왜 그러냐고도 합니다. 남부노조 조합원 대부분이 사측의 협박에 못이겨 발전노조를 탈퇴했지만, 언젠가는 함께 해야 할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발전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 소속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발전노조의 교섭참여를 거절했던 남부노조가 이제 와서 발전노조는 대안이 있느냐고 화살을 돌립니다. 발전노조의 대안은 분명합니다. 큰 투쟁도 필요 없는 합의거부가 대안의 시작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징계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합간부의 희생정신과 용기만 있어도 이 싸움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빼앗으려 달려드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버티는 것 말고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쪽에서 내놓는 것입니다.

남부발전 노동자 여러분!

복지축소와 퇴직금 삭감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축소,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기타 임금체계개편, 그리고 경영효율화란 명목으로 각종 구조조정이 해일처럼 밀어닥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오늘 거절하지 않으면 내일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퇴직금 삭감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이번 찬반투표부터 압도적으로 부결되어야 합니다.

남부노조 조합원 여러분!

기업별노조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발전노조가 소수노조로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자의 삶은 더욱 빠르게 피폐해지고, 자존심은 짓밟힐 것입니다. 이제 발전노조로 돌아와 주십시오. 함께 싸우고, 함께 지킵시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현규 드림

## □ 상여금 100%의 기준임금화는 기본급화가 아닙니다.

어느 기업별 노조나 다 마찬가지로 최근 진행된 퇴직금 삭감에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여금 100%를 기준임금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전달하는 기업별노조간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상세한 설명없이 기준임금화라는 용어에만 치중하고 있는 듯 합니다. 기준임금화와 기본급화라는 말의 차이가 천지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의 오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999년-2000년 전격노조 시절 퇴직금누진을 삭감시 우리는 회사와 노동조합으로부터 비슷한 사기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발전노조는 '기준임금화라는 용어가 기본급화라는 의미는 아님'을 다시 한 번 전달해 드립니다.

## □ 남부발전 퇴직금삭감에 압도적 부결로...

오늘부터 남부노조가 목적사항 퇴직금 제도변경(안)을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합니다. 목적사항외 구두로만 설명이 있을 뿐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조합원들은 헛갈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투표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가결되는 순간 퇴직금삭감이 확정되어버린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 투표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퇴직금은 가장 안전한 노후생활 자산이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확대와 급기야 퇴직연금제도로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퇴직금으로 또 다른 노동자가 희생되는 일 또한 없어야 합니다. 나의 퇴직금이 자본이 되어 주식시장을 떠돌고, 이 자본은 또다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칼날이 되어 다시 우리 노동자에게 돌아올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 □ 부결이후를 대비합니다. 개별동의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남부발전의 이 이상한 투표가 부결되면, 그 이후 예상되는 회사의 대책은 중부발전의 경우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동의서를 징구해서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관철시키려 할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개별동의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일반화되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회사의 회유와 유혹 또는 강요에 못 이겨 개별동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반드시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별로 하기 힘든 경우 노동조합에서 대신해서 집단적으로 철회하는 방법을 고려중입니다. 또한, 자발적 의사표시에 반할 정도의 강요에 의한 개별동의서는 무효가 되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발전노조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채증과 향후 퇴직간부 및 퇴직직원의 증언등을 토대로 반드시 퇴직금 되돌리기 투쟁을 해 나갈것임을 천명합니다.

또한, 이 모든걸 막아낸 후 조합원께서 우려하는 회사의 임금동결 주장 또한 중노위를 통한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를 이용한다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뛰어 넘는 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으나, 우려하는 만큼의 임금동결이 또한 무난히 돌파할 수 있으리란게 발전노조의 판단입니다.

## □ 산 넘어 산... 아직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전기신문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서둘러야』라는 제하아래 발전 5개사중 동서, 서부, 남부, 중부 발전4개사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공동추진안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직무개발과 임금피크율 설정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 발전 5개사가 복지축소에 합의하고 마지막 남부와 중부가 퇴직금 삭감을 진행하는 와중에 연이은 후속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남동노조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남동노조는 이 협의체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추진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발전노조는 이러한 예정된 수순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으나, 기업별노조는 이를 묵살하거나 묵인하고 복지축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금마저 삭감했고 삭감하려는 기업별 노조는 또 어떤 축소 경쟁(?)을 펼칠지 두고볼 일입니다.